

6·2시민선택, 보수반동 역주행 패퇴시킨 민주적 시민역량

평화·민주·복지의 대한민국으로 가자

이병천·홍윤기 _ 공동편집인

6·2시민선택 : 6월항쟁 이래 정치과정에 대한 총괄적 시민평가
또는 제2의 6월항쟁

6·2지방선거 이전 천안함 사건이 터졌을 때 보수세력은 이명박 정권의 집권 시기가 ‘천안함 이전’과 ‘천안함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6·2지방선거가 그 어떤 정당의 주도나 승리가 아니라 사실상 숨었던 민심에 의해 그 결과가 결정된 ‘6·2시민선택’으로 귀결되면서 MB집권은 6·2이전과 6·2이후로 나뉘게 되었다. 1995년 이래 지방선거는 흔히 집권세력의 중간평가로 기능해왔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체로 집권 여당에 불리한 것으로 예측되었고, 또 예측대로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번 ‘6·2시민선택’은 집권 여당에 불리하다는 지방선거의 통상 상황을 — 비록 더 극적인 양상과 규모이긴 했지만 — 그런대로 전례에 따라 — 반복하기는 했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는 예전과 전혀 다르게, 집권 여당의 압승을 예측하는 가운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은 선거 결과로 말미암아 천안함 사건은 순식간에 그 압도적인 정치적 의미를 상실하면서 한갓 안보 사건으로

상대화돼버렸고, 그 자리는 2년 전 현 집권 세력에게 이번에 빼앗은 것만큼 물표를 안겨주었던 ‘민심’이 대신 점거하였다.

이 민심은 이른바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크게 진동하였던 민심의 추가 이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한민국 민심은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이어지는 탈 3김 체제 관점에서 보면 여러 면에서 정반대의 입장이지만 그 저류에는 많은 점에서 공통된 대한민국 제도정치권의 모든 정책 스펙트럼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하에서 대한민국 시민은 천안함 사태에 직면하여 남북 간에 촛불의 양보도 없이 준전시 또는 전시 상황에 돌입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 결론으로 시민들은 천안함 사건으로 철저히 본색을 드러낸 이명박 보수반동체제가 이제 막 전열을 갖추기도 전에 정치적 기반을 무너뜨렸다. 6·2시민선택은 앞으로 대한민국 제도정치권이 어떤 형세를 갖추든, 대한민국 제도정치와 시민정치에 대해 6월시민혁명 이래 모든 정치과정을 총괄하여 향후 지표를 제시하는 정초적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 6·2지방선거는 이렇게 대한민국 안에서 좌우 정치권, 그리고 남북한 분단체제 아래의 민주주의 운영에 대해 대한민국 시민이 총괄적으로 지표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분명히 단언한다. 6·2시민선택은 사실상 제2의 6월항쟁이다!

‘주체 없는 혁명’의 양상 : 타도 없는 전복

선거전 2010년 대한민국 6·2지방선거의 승패는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적 결과는 예정됐던 것과는 정반대로 귀결되었다. 우리는 선거일에 투표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일어난 것은 아무도 기도하거나 기획하지 않은, 일종의 혁명이었다. 분명히 혁명으로 승리한 세력과 혁명으로 패배한 세력이 나왔다. 그러나 승리한 자들은 승리를 기대하지 않았고, 패배한 자들은 패배를 예상하지 못했다. 모두 그 반대였다. 애초 승리자들은 승리를 희망

했지만 확실하게 패배할 것으로 예상했다. 패배자들은 패배를 예상조차 하지 못했고 정반대로 확실하게 승리할 것으로 확신했다. 6·2 이후 승리자로 나타난 세력은 6·2 이전에는 선거도 하기 전에 패배자였고, 6·2 이후 졸지에 패배자가 된 세력은 6·2 이전에는 선거도 하기 전에 이미 승리자였다. 우리 안에서 승리자와 패배자는 이미 대부분 결정돼 있었다.

‘6·2시민선택’ 당일, 야밤과 새벽의 어둠 속에서 ‘혁명’의 서광이 서서히 비쳐들었다. 승리자와 패배자가 하룻밤 새 모두 전복되었다! 전국에 걸쳐 지방권력이 전면적으로 교체되었다. 적어도 지역 차원에서 MB와 한나라당의 집권세력은 전국적으로 축출되었다. 그들 집권세력은 이긴 곳에서도 이긴 것이 아니게 되었다. 적어도 지역 차원에서 야당들의 각종 연합세력은 전국을 석권했고, 설사 진 곳에서도 진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졌다. 기존 권력은 도처에서 전복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히 권력이 전복됐는데도 승리자는 패배자의 피를 요구하지 않았고, 패배자는 숙정(肅正)당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없었다. 혁명은 **‘우리 안의 혁명’**이었다. 혁명을 만들어낸 시민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만들어낸 줄도 모르고 실시간으로 변해가는 숫자 영상을 구경하는 시청자일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이 피도 눈물도 없이, 오직 텔레비전 앞에서 그 영상을 주시하던 우리의 마음(영혼?) 안에서 일어났다. 보통 “피도 눈물도 없다”는 말은 비정한 인간의 잔인한 행태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번 혁명은 텔레비전 영상으로 실시간 집계되는 숫자에 따라 우리 안에서 애초의 승리자가 타도되고 기왕의 패배자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체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승리자는 화면 앞에 있는 것으로 충분했고, 패배자 역시 화면을 끄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이런 온라인의 가상현실은 동이 터오자 바로 오프라인 실제 현실이 되었다.

■ **마음과 영상(mind & screen)** : ‘6·2시민선택’이 혁명적으로 완성되는 데 ‘당장’ 필요했던 것은 단지 이 두 가지뿐이었다. 피 냄새나 눈물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난 두 달간 저쪽 타이 민중과 방콕 시민은 수상 하나 쫓아내는 데 두 달 이상 피와 눈물을 흘리고서도 아무런 결실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은 전국적으로 권력교체를 단행했으면서도 밤새 잠을 못 잔 덕분에 눈두덩이 부어올랐다는 것뿐이다.

분명히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민주당도, 민주노동당도, 진보신당도 아니었다. 그 어떤 시민단체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권력전복이 일어났다. 누가 무엇을 해서 일으킨 것인가? 모두 국민이 승리자라고 했다. 그런데 국민이 한 일은 무엇인가? 한 것이라고는 희망하는 것뿐이었다. 이렇게 희망만으로, 희망만 전하면서, 희망하는 표시만 했다. 그런데 일어났다. 정말로 희망했던 혁명이 일어났다. 적극적 행동 없이도 혁명이 일어났던 전례는 있었다. 20여 년 전 독일이 통일될 때 통일의 주인공이었던 동독 시민들이 한 일은 자기 나라에서 도망치는 것이었다. 혁명 현장은 비워졌는데 그 빈터에서 통일이라는 혁명이 일어났다. 2010년 6월 2일, 대한민국 시민들은 오직 희망하는 것을 종이에 적었다. 거의 기적이었다. 붓 뚜껑으로 짚은 기표가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개인적 선택이 사회적으로 제곱승수(乘數)되었고 국가적 혁명이 일어났다. 시민선택 6·2 — 가히 ‘주체 없는 혁명’이라 할 만하다.

■ 타도당한 자 없는 전복 : 그 끝은 매우 평화로웠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랐다. 6·2선택 이후 이틀 지난 6월 4일,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다. 4대강사업 관련 주식들이 최대 80% 낙폭을 기록한 것 빼고는 금융시장은 급속히 안정되었다. 아시아 안보회의 참석차 싱가포르에 간 게이츠 미국방장관은 미국 항공모함이 서해에 파견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언명했다. 한국 국방부가 북한을 모의 상대로 삼아 9만 7000톤급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의 지원 아래 서해상에서 대규모 대잠수함 방어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을 ‘북풍’으로 활용하려 한 조치에 대해 자기계산에 따라 공조

의지를 과시했던 오바마 정부는 6·2선거 결과에 당황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선거 직전 제주도에서 열렸던 한·중·일 삼국정상 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천안함 사건에 대해 국제적 무한공조를 약속했던 하토야마 전 일본총리는 공교롭게도 한국 지방선거가 이틀 지난 이 날 사퇴하고, 간 나오토 부총리가 총리직을 승계하였다.

붕괴된 지역 권력을 뒤로 하고 선거가 끝난 다음 날 싱가포르의 상그릴라 안보대회장으로 날아간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천안함 군사도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핵문제와 군사도발은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참을 촉구했다. 국내에서는 아무도 신경 쓰는 기운이 안 보였으며, 선거 내내 안보 열풍에 매진했던 조중동 극우보수언론 들조차 자그마한 단신으로 취급했다.

응당 타도당했어야 할 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들 일에 신경 쓰기에는 그동안 거꾸로 갔던 시간을 되돌려 다시 앞으로 나가야 할 우리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 분명히 모든 이들이 **사기당한 지난 2년간의 꿈과 빨리 이별하고 싶어 한다.** ‘6·2시민선택’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잘 있거라 반동이며, 널 두고 우린 이제 평화, 민주, 복지로 간다!**”

반동은 결코 척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반동은 떠돌림당했다. 반동은 지금까지 거꾸로 돌아간 대한민국과 한반도 시간만큼 역사와 현실에서 뒤쳐진 자리에 그대로 처박힌 채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시대와 민주 시민에게 떠돌림당했다. 이렇게 타도당한 자도 타도하려고 나선 자도 없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6·2시민선택은 왜 혁명인가?

‘MB식 반동’의 형성 : 87년 체제에 대한 연성쿠데타, 야만에서 야비로의 진화

지난 2007년 12월 19일 이명박 정부의 집권은 당시 누구나 예상하던 스토리라인이었다. 대중적으로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과 노무현 혐오는 극에 달한 상황이었고 1가구 1편드의 대박 꿈과 부동산 투기는 거의 광기에 필적하였다. 단지 경제적으로 잘사는 정도가 아니라 큰 부자로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는 욕망은 국민신앙이 되었다. 이 국민신앙은 엄청난 여론이 되어 보수정당 안에서도 정당·정치적 기반이 취약했던 MB를 대폭 지원하면서 그를 대권주자로 밀어 올렸다. 경쟁자와 500만 표 차이는 그가 전체 계층과 전체 세대에 걸쳐 큰 지지를 받았음을 입증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명박 씨에 대한 국민적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그동안 쌓아온 민주화와 남북화해의 성과를 무조건 유보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한갓 평범한 샐러리맨 출신이 재벌과 사회 권력의 유착망 안에서 대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그의 출세 과정 자체가 대한민국 국가의 민주화와 사회적 자유화 덕분이었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생활세계 안에 축적된 민주주의와 자유의 생활문화는 일단 기본으로 놓고, 그 위에서 대박이 터지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당시 시민대중은 내 몸이나 목숨 그리고 내 가족의 장래를 근본적으로 다치게 만들 정도만 아니라면 민주주의나 자유를 약간씩은 접어두어도 좋다고 자기 자신을 달랬는지도 모른다. MB 집권 초기 2년 동안 대한민국 시민은 **자신들의 대박신앙과 이명박 정권의 자본독재를 거의 동일시했다**. 밥 먹여주지 않는 민주주의에 대해 불만을 가지면서도, 아무리 독한 극우보수라도 지금까지의 민주주의를 그리 쉽사리 부정할 수는 없다고 예상하였다.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은 이런 시민대중의 기대욕망을 배신하고 모든 것을 기득권 기업의 이윤 증식망 안으로 재편하는 자본독재체제의 구축 과정이었다. MB식 자본독재체제는 87년 체제가 축적한 모든 정치·경제·사회적

성과를 바로 그 87년 체제 안에서 순차적으로 폐기하고 부정하고 회화화하기 위해 군부의 무력만 제외하고 국내에서 동원가능한 모든 권력 수단을 동원하여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상황을 거의 87년 수준으로 역주행시켰다. 그것은 마치 **연성 쿠데타 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국가 민주주의의 잠식** : MB정권은 경찰, 검찰, 국세청, 감사원, 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즉시, 단지 반대정파나 정치적 인물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그 활동가, 그리고 기업들까지 총체적으로 겁박하여 단 시간 내에 과거 독재 시절의 총체적 통제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하였고 상당 정도 성공하였다. 이것은 결국 권력기관에 대한 문민적 또는 시민적 통제를 현저하게 약화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 국가와 민주적 시민권의 병행 발전을 도모하는 민주주의와 시민의 진화법칙에 전적으로 역행하는 결과를 빚었다.

■ **경제적 권리의 부정과 시민의 시장참여권 부정** : 근본적으로 자본독재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대기업의 일방적 자본 증식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시민의 모든 행위에 대해 가장 극악한 압박을 가했다. 촛불 시민들은 항쟁이 종식된 후 사후 기소에 시달렸다. 용산 철거지역의 자영업자들은 시장에서 축적한 자신의 권리금을 부정당하고 무자비한 경찰 진압 속에서 불타죽었다. 공장의 노동자들은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차적으로 정리해고 되었다. 노동조합의 상근자들은 자본의 이익에 일방적으로 맞추어진 타임오프제로 형편없이 조직 위축을 감수해야 할 처지로 내몰렸다. 시민들의 살림살이에서 자기능력과 욕구를 다양하게 배양하고 교류해야 할 현장인 시장은 공정성을 잃은 채, 자본독재의 전횡에 지배당했다. 국제시장의 수익이 국내시장으로 유입되는 경로는 점차 협소해지고, 국가적 부가 국민 대중 공동의 부로 전화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졌다.

■ **국가에 의한 시민성의 폐쇄와 국가 집착의 회피** : 이명박 정권은 시민에 대한 사찰을 상당 부분 부활시켰을 뿐 아니라 시민에 대한 기소권을 남발하여 시민의 표현과 행동의 권리에 근본적으로 재갈을 물렸다. 물론 이런 기소에 의해 법살(法殺)의 위협에 처한 시민의 수는 극히 소수이긴 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 폭력적 조치에 걸려든 대한민국 시민 가운데 전직 대통령 노무현도 있었다. 그리고 소수자를 상대로 한 이런 식의 전횡은 다수 시민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를 독가스처럼 유포시키는 데 아주 유효했다. (이 점에서 정몽준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장의 독가스 비유는 역으로 아주 적절한 비유였다.) 많은 시민들이, 특히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솔직하고도 개방적인 자기표현을 스스로 통제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의사는 알 수 없는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시민성이 발휘될 공적인 영역은 현저하게 위축되었다.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작동에 대해 시민의 책임을 물을 여지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시민사회와 생활세계에서 국가에 의한 시민의 직접적인 겁박은 누구나 체감하는 일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MB체제에 비판적인 시민은 비판적인 의미에서, MB체제에 친화적인 시민들은 친화적인 대로, 적어도 일상적인 기분상 한국이 유신체제로 되돌아갔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유포되었다. MB체제에 호의적인 시민은 응당 유신체제 정도쯤 되어야 제대로 국가가 돌아간다고 믿어서 MB를 환영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유신체제가 복귀했다는 것에 지레 위축되어 적어도 일상생활에서는 MB에 대한 일체의 태도표명을 삼갔다. 숨은 민심은 사실은 처음부터 숨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아예 표출되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정체되었다.

■ **법치주의의 훼손** : 시민에 대한 국가의 권력행사에서 가장 전형적인 법 적용은 이명박 정권 들어 거의 회극적 수준으로 편파적이 되었다. 자기편에 대한 법 적용과 반대편이나 적대자 또는 비판자에 대한 법 적용은 누가 보더라도 편파적이었고, 시민의 일상 하나하나에 심대한 상처를 남겨 놓았다. 이명박 정권은 아직 —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 절차적 민주주

의의 최후 보루인 선거의 투개표 과정에까지 직접적으로 간여하지는 않는다. (만약 이러하다면 이승만 시절로까지 퇴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거기뿐이었다. 이명박 정권 아래 민주주의 정치문화와 법 현실은 민주주의의 상식 선에서 크게 후퇴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주 반동적이었다. 이명박 정권의 직접적 통제 아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 차원에서 정책 검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조치를 남발하였으며,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 형성을 되도록 봉쇄하는 쪽으로 권한을 남용해 선거문화 자체를 현저하게 오염시켰다. 선거에서 투개표 과정만 그대로 두었을 뿐, 선거과정의 민주적 운영과 민주주의적 성숙은 사실상 억압당했다. 이번 6·2지방선거의 경우, 선거 분위기를 위축하려는 선관위의 옹졸한 선거 운영은 선거 분위기를 동결시켜 과거 국민적 토론 없이 투표만 강요하는 유신 시절의 일방적 투표 문화 수준에 접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은 폭력과 고문을 상시적으로 자행하는 야만스런 정권은 아니다. 그렇지만 지배권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시민의 일상적 약점과 취약성을 악착같이 몰고 늘어지는 야비한 정권임에는 분명했다. 우리가 MB식 반동이 과거 반민주 독재정권보다 진화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통치행태가 폭력을 이용하는 야만성에서 법의 강제성을 교묘하게 구사하는 야비함으로 진화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식 통치는 87년 체제를 야금야금 잠식하기는 하였지만 그 최전선까지 허물지는 않는, 이슬 이슬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면 부정** :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보수반동 통치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처 과정에서 민주화, 자유화와 더불어 87년 체제의 가장 근본적 성과인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라는 기본선을 여지없이 건드려 국민 대중의 인내심을 그만 넘어서고 말았다. 87년 체제는 국가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한 축으로 한다면, 남과 북의 분단 상황을 **민족 내 평화 최우선주의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는 또 다른 축으로 하여 성립하였다. 87년의 「대한민국헌법(大韓民國憲法)」은 그 전문(前文)에서 “조국(祖國)의 민주개혁(民主改革)과 평화적 통일(平和的 統一)”을 “대한민국(大韓國民)”의 “사명(使命)”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제4조는 아예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指向)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平和的 統一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국가적 임무로 못 박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헌법」은 선출된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 취임식에서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노력”할 것을 선서하도록 정해 놓고 있다(제69조). 그렇게 길지 않은 헌법에 “평화적 통일”이라는 말은 이렇게 세 번에 걸쳐 반복된다.

즉 대한민국의 존립근거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남북한 간의 민족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세계평화와 맥을 같이하는 민족평화의 유지와 발전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모든 국가기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고 헌법에서 지칭하는 국민 모두의 최고책임사항이다. 다시 말해서 평화통일은 대한민국에서 특정 정당의 정책사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의 존립근거(raison d'être)이자 존립목표이다.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통일의 추구에 있어서 명백하게 세 가지를 배제한다.

- 우선 그것은 민족의 적화통일을 배제한다.
- 그 다음 그것은 통일의 추구에 있어서 전쟁 수단에 호소하는 것을 배제한다.
- 나아가 그것은 통일과정과 통일 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그 어떤 안팎의 반민주세력에 의해 도전받거나 침해되거나 약화되는 어떤 경우도 배제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통일의 원칙은 국가의 헌법적 목표로서는 유신헌법에서 처음 명기되어 반독재 민주헌법 제정 과정에서 유신헌법 조항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민주헌법 안에 온전하게 계수되었던 것으로서, 과거

독재자와 새 시대의 민주세력 사이에 국가경영을 두고 거의 유일하게 의견 일치를 본 사항이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대한민국의 국가적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북한과 비교하여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이면서 평화국가라는 자기 국가관에 근거함을 천명한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의 힘이 독재와 전쟁의 힘보다 명백히 우월함을 확신하지 않는 한 전면에 부각할 수 없는 국가목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를 맡은 모든 집권세력은 통일을 평화적으로,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추구할 모든 정책 수단을 개발하고 투입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곧 여전히 평화적인 대안이 있는데도 그것을 외면한 채 굳이 예단적으로, 그것도 성급하게, 평화적이지 않는 노선을 우선적으로 택할 그런 임의적 자유는 어떤 집권세력에게도 없음을 뜻한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MB정권은 집권 직후부터 민족문제,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문제를 국가적 위상의 문제라기보다 국내 일부 정파의 편협한 이념을 관철하는 정책수단으로 격하하면서 위험한, 일방적 승리주의와 대결주의를 추구해왔다. 이제 60여 년을 넘기고 있는 분단체제가 겨우 10년 간의 해빙정책으로 단숨에 변하기를 기대하는 그 정책적 순진성과 역사적 소박함은 그만두고라도, 북한의 간헐적 자극에 항상 냉전의식의 원점으로 돌아가 국가를 전시상태로 변모시키는 남측 기득권 우파 세력의 경직성도 거의 변한 바가 없다는 것이 이번에 또 한 번 실증되었다.

이 점에서 이명박 정권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의식과 헌법의식, 나아가 국가의식이 거의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명박 정권은 남북한 사이에 팽팽한 긴장과 대결, 그리고 간헐적인 무력충돌에도 불구하고, 이 적대적 흐름과 나란히 1970년의 7·4공동성명부터 거의 40년을 지속 해온 대화와 화해 협력의 지향을 완전히 외면함으로써 사실상 국가목표를 일순간에 배신했을 뿐더러,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 언술상으로 실질적 준전시 상황을 조성하였

다. 6·2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이 남북관계의 전면 단절 선언은 87년 체제를 상대로 집권 첫날부터 진행되어온 이명박식 통치방식이 87년 체제를 그 근저에서 뒤흔들다가 마침내 일종의 반동체제로 귀결되었음을 알려주는 기본 표징이 되었다.

‘MB식 반동’의 체감과 그 결과 : 소득 없는 성장의 초점 없는 지속, 생활위기의 방치, 전쟁위기의 근접

이명박식 통치는 중도실용의 친서민 원칙을 간간이 표방하였다. 그러나 그 통치의 근본은 신자유주의와 극우보수노선을 조합해 한국 시장에 소수 대재벌과 지구자본의 독점적 활동영역을 마련함으로써 지구상에서 유례없는 자본독재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다. 이런 통치의 기조는 이제 선거라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 부분만 남기고는 87년 체제를 총체적으로 부정한 ‘MB식 반동’으로 귀결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보수 반동체제는 어떤 경험을 안겨주었는가? 그것은 **MB에 대한 대중적 기대의 총체적 배신**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기대욕망의 배신**을 들 수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통치 기간 동안 이명박 씨를 지지하지 않았던 이들뿐만 아니라 그를 신앙적으로 지지했던 거의 모든 시민들이 MB식으로 해서는 결코 부자가 될 대박이 자신들에게 터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다. 747공약은 집권 첫해 가을의 경제위기 속에서 흔적 없이 실종되었으며, 모든 친기업적 정책은 계층적으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실제로 2년 반 전 우리는 더 나아지고 싶은 우리네 살림 욕심 때문에 그들에게 이번에 돌려받은 것 이상의 권력을 몰아주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밀어줬고, 이들에게서 부자가 될 희망은 없을 뿐더러 도리어 지금까지 쌓아왔던 살림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내놓을 일이 벌어졌다. 당장의 천안함 위기가 아니더라도 이명박 정권하에서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은 2009년 1만 4579명으로 2008년 1만 2270명보다 18.8% 늘었다. 경찰청 발표(2010. 6. 2)에 따르면 자살률은 2005년 1만 4011명으로 정점에 올랐다가 2006년 1만 2968명, 2007년 1만 3407명, 2008년 1만 2270명으로 주춤하다 4년 만인 2009년에 다시 1만 4000명을 넘어섰다. 자살의 직접적 원인은 정신병이나 신상 문제, 직장 문제 등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자살이 급증하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대한 원인이 경제적 좌절에 있는 것은 이미 실증되었다. 그렇다고 할 때 현 정권 2년차에 자살률이 다시 이전 정권 때를 훨씬 상회한다는 사실은 사회적 패자(social loser)를 양산하는 기제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둘째로 이런 기대육망의 배신 뒤에는 **저고용 흑자, 소득탈취 성장**이라는 실속 없는 개발위주 경제정책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대기업이 국내시장과 대외무역에서 엄청난 흑자를 올리더라도 그것이 고용과 소득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지 않는 것을 이제는 누구나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생존을 위한 기초소비에서 나온 소득 지출은 다시 대기업과 대규모 유통사업장으로 흡수되고 다시 시장으로 순환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비정규직의 소액소득이나 빈곤층 국가보조금조차 다시 대자본으로 흡인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결국 그 어떤 소득보전이 옆에서 제공되거나 고용이 지속적으로 보존되지 않는 한, 시장 교환을 통해 이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손에 든 몇 푼의 현금 조각마저 계속 시장에다 내버리는 것이나 거의 다름없게 된다.

셋째로 이명박식 보수반동체제의 가장 전형적인 억압방식은 아주 집요한 **시민통제 체계의 부활**에 있다. 법치주의를 기소편의주의로 오용하는 MB식 억압은 시민의 의견 형성과 그 표현을 억압하면 시민의 비판적 의견 자체를 자기 측에게 유리하거나 순응하도록 통제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이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각종 언론매체의 경영자와 실연자를 대폭 교체하여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조작하고, 모든 정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변조한다. 그리고 그에 반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은 해직시키거

나 기소하고, 비판적 지식인들이 공적 언론에서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대폭 박탈해버린다. 여론 조사 자체도 이런 의견 억압 정책의 영향을 받아 그 어떤 비판적 의견도 공적 장소에서 바깥으로 노출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었다. 그 결과 일단 당장은 현 집권세력에게 유리한 의견만 유통되고 집계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인지 지체(認知遲滯)를 초래하면서 집권세력 자체를 스스로 눈멀게 하는(自己瞎盲) 결과**를 초래했다. 62시민선택은 그 내용도 놀라웠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집권층을 비롯해 이 사회의 유력한 지도층 모두 62선거가 개표될 때까지 자신들이 알고 기대했던 예상과 현실이 전적으로 달랐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당일 방송3사 출구조사를 제외한 한국의 모든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와 선거결과 예측이 빗나갔다. 시민은 자신들이 확신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였으며, 그것도 전국적 차원에서 압도적으로 그러하였다. 여론 조사가 빗나간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단지 핸드폰 사용자를 표집하지 못했다는 기술적인 것에 원인이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였다. 즉 표본 대상에서 응답률이 아주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세인 양 유포하여 사실상 사기인 여론 조작을 해놓은 것이다. 이것은 결국 여론조사기업의 상업적 이익이 공적 의견 형성을 오염시킨 대표적 사례가 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론 조사에 대한 응답 자체를 기피하게 만든 사회적 억압 분위기가 일반 시민에게도 감지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개별 지역에서의 대립양상은 이슬이슬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동의한 형태에 따라 산출된 결론은 집권층의 인식과 정반대였다. 사실은 이런 자기암맹에 의해 현실을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인식력 결핍증이 현 집권세력의 가장 심각한 무능력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눈을 멀게 한 자들이 이 나라의 대권을 움직이고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이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가?

넷째로 MB 보수반동의 최악의 귀결은 별로 납득할 수도 없는 위기상황을 앞에 놓고 전 국민에게 생명을 건 대결의 길을 가도록 강박하는 것이었다. 위기는 결코 기회이지만 했던 것이 아니었다. 위기는 정말 위험했다. 이

것은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특히 청장년층에게, 사이버공간의 가상게임이 아니라, 실권자가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목전의 위험상황으로 체감되었다. 아무 대비도 하지 않고 허장성세만 떨다가 마흔여섯의 젊은 생명을 속절없이 보낸 것도 모자라, 전쟁기념관에서 두 눈 부릅뜨고 대책 없는 전쟁 의지를 내뿜는 이 나라 최고통치권자의 오기는 결코 우습지 않았다. 정말 공포감 그 자체였다. 이 나라, 내 삶의 현장에서 당장 사라지고 싶을 만큼 무서웠다. 이대로 가다가는 덧없이 죽는 것이 아닐까? 정말 이 자리에서 바로 없어지고 싶을 정도로 숨이 오그라들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오기를 이성적으로 견제할 힘이 우리 사이에 없을 것 같은 무력감이었다. 이렇게 죽음이 무서우면 자살을 택한다고 했던가? 같이 죽지는 발악도 휴전선 넘어 여과 없이 내려왔다.

분명히 우리는 지난 20년간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남북 간 군대 사이에 간헐적으로 전투는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남북의 꽃다운 청년들이 스러져갔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곧바로 전면전쟁으로 치닫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주조였다.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는 서해상에서 더 이상 충돌이 없고 남북의 어부들이 평화롭게 공동조업을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협정까지 맺었다. 남북한의 공동번영이 평화통일을 보장한다는 믿음 아래 남북이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있는 경제협력의 기반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런데 이런 남북관계와는 그 맥락이 전혀 다른 북핵문제를 민족문제로 끌어들이며 결국 남북 간은 40년 교류의 역사를 한순간에 접고 말았다.

핵 문제가 대한민국 현 집권세력의 본래 관심이 아님은, 북한과 동일하게 국제사회의 이익에 반하여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이란과 우리가 버젓하게 교류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미국과 더불어 세계의 핵문제를 해결할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 왜 이 두 나라와는 계속 교역을 하여 그들이 핵무기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자금을 조성하도록 방조하는가? 기본적으로 북한 핵은 국제공조의 틀 안에서 별도로 처리해야 하고, 또 그런 모드로 처리되던 문제였다. 그런데 대한민국 안에서 북핵문제는 현실적

으로 핵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남북한 민족을 갈라놓아야 자기
기득권이 유지되는 집권세력과 기득권세력의 기득권 확보문제다. 마흔여섯
의 피도 모자라, 더 많은 피를 흘려 민족을 가르고, 지역을 가르고, 계급을
갈라, 그 깊고 깊은 상처를 밟고 ‘내 권력’만은 유지하겠다는 대한민국 집권
세력의 협박 앞에서, “아니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겠다던 약속은 어디 가고
이제 와서 전쟁이나 하자고 하는가?”라는 항의는 들어설 틈조차 없었다.

분명히 국민 52.9%는 MB정권의 전쟁불사론이 단지 선거용이라고 간파
했다. 반면에 그와 거의 같은 비율인 49.1%는 진짜 전쟁 위협이 있다고 판
단했다. 그런데 선거용이든 진정한 의지든, 무차별 죽음을 함축한 전쟁으로
선거를 농단하는 일방적 작태에 대해 이미 선거 전에 압도적 다수가 거부
감을 표출했다. <한겨레21>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한 ‘전쟁
위기설 관련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군사
적 방식으로 보복해야 한다”는 응답은 6.7%에 그친 반면, “대화를 통해 긴
장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률(35.5%)이 가장 높은 가운데, 그 어떤 제재라
고 하더라도 “유엔을 통한 외교적 압박”(34.7%)이 바로 뒤를 이으면서, 군
사보복보다 경제제재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21.1% 정도였다. 즉 어떤 경
우에도 직접적인 전면 전쟁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이미 선거 전에 표출되
었다.

6·2 시민 선택 : 평화, 복지, 지역균형, 기층시민의 생활권, 그 리고 생태

■ **전쟁이 아닌 평화!** **죽음이 아닌 삶!** : 이번 6·2 시민의 선택은 단호
하게 응답했다. “아니다! 같이 살 길이 엄연히 있는데, 다 같이 죽음을 각오
하지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우리가 보기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는 대통

령의 모습은 그 어떤 결기(決氣)가 아니라,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오판했던 짐 존스 교주가 자기를 따르던 914명의 신도들에게 강제로 집단 동반자살을 시행했던 1978년 11월의 가이아나 인민사원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오기(傲氣)와 닮았다. 참으로 민망스럽게도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런 오기에 호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마련된 자기 삶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숨기지 않았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다음 중 어떤 식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가족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피한다”는 응답이 32.1%로 가장 많았으며, “후방에서 전투병력을 돕는다”가 28.6%로 그 다음이었으며, “전쟁은 군인 몫이므로 생업에 종사한다”가 26%로 응답하였다. 매우 공세적이고 보복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직접 군에 입대해 전투에 나선다”는 응답이 겨우 6.9%에 그친다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반응일 것이며, 국민 전체가 대단히 비겁하고 나약하다고 평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할 경우 누가 직접 나가서 죽고 누가 외국으로 가장 먼저 도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미 통용되는 계급차별주의적 선입관이 형성된 분위기를 감안하면, 나라 전체를 자발적으로 군사주의적인 분위기로 끌고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추정된다.

■ **‘나만의 부가 아닌 ‘더불어 복지’를!** : 2년 반 전 MB는 그야말로 부정적 의미에서 포퓰리스트적으로 선동했던 만인부자론, 즉 “모든 이에게 대박과 부(富)를!”이라고 요약되는 메시지로 국민적 신앙을 불러일으켰다. 거의 모든 시민들이, 특히 인생의 전환점에 있던 40~50대가 MB를 통해 각자에게 돈벼락이 올 것을 열망했다. 그러나 그는 집권 첫해부터 부유특권 기득권층에 편중된 정책을 쏟아내 자기에 대한 대중적 열망을 급격히 냉각시켰고, 그 다음에 밀려든 외환위기에 대해서는 앞선 참여정부 수준 이하의 관리능력을 보였다. 무엇보다 이 금융위기에 대해 그와 그의 경제팀은 아무런 예지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 정권은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직전까지 그 인수를 추진하였으며, 두바이가 완전히 몰락할 때까지 그 모델을 따

라가려고 두바이 모델의 기획자를 대통령 인수위뿐만 아니라 해외자본 유치 고문으로 삼아 정부 일에 동참시켰던 것이 아닌가.

2008년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은 이 정부가 안정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경제 전반을 균형 있게 운영할 능력조차 있는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참여정부가 묶어두었다는 반기업적인 규제 전반이 해제되었는데도 대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창출에 거의 돈을 풀지 않았다. 지구 경제 전반을 휩쓰는 수요부족과 공급과잉의 일반 조건 안에서 자기 기업만 살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확연하게 들여다보이는 처신들이었다. 기업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들의 활동을 담보로 하는 증권이나 펀드가 제대로 수익을 낼 도리가 없었다. 결국 ‘나’만 부자가 되고 싶더라도 그 길은 점차 봉쇄되어가고, 어쩌다 투자한 펀돈은 대자본에게 양털 깎기 듯이 흡인당하면서 강통계좌가 점차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차에 들면서 ‘나만의 부’는 점점 물 건너 간 몽상이 되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애절한 생활감각, 그리고 급속히 진전된 빈곤화로 인해, 예전 같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자녀들의 학교급식비까지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 2010년 들어 진보적 시민단체들 사이에 급격하게 제기된 ‘친환경 무상급식’ 기획은 4대강사업이나 세종시 수정안과 비교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급속히 사로잡았다. 이제 시민들의 관심은 점차 ‘나만의 부’에서 ‘더불어 복지’로 냉철하게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 **서울 중심주의에서 지역균형주의로** : 이번 6·2시민선택에서 두드러졌던 권력전복에서 그 초점은 단연 서울이 아니라 지방이었다. 지방은 더 이상 서울의 식민지가 되기를 거부하였으며, 서울 중심 의제를 자기생활권 의제로 대체하였다. 서울 중심으로 제기된 안보 논리와 전쟁 분위기 살포는 서울과 휴전선 접경 지역 전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너무나 뜻밖에도 ‘접적 지역’인 파주, 고성 등을 포함한 강원, 인천, 그리고 경기도 서부 지역

이 대거 서울 논리에 반기를 들었다. 충청도의 반발은 이미 세종시 문제에서 예측할 수 있던 것이지만 지방의 감각이 이제는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확보한다는 실용적 차원을 넘어 권력의 분점이야말로 가장 유익하다는 지역분권 차원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서울에서 총독처럼 파견된 후보들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거의 모두 낙마했다는 것은 앞으로 나라발전 구상에서 지역의 이익과 결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한 전국 권력의 확보가 불가능함을 지표적으로 보여준다.

■ **특권지배층 독식에서 기층시민의 생활권 확보로!** : 지방의 반란은 기층 생활권의 자기주장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독재적 지방권력이 서울 중심주의를 관철하는 지방 식민지 총독부였다는 것이 여실히 자각되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집권세력은 최상층부 광역단체장 자리만은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민생활의 세포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권력은 대거 야당권으로 이동했다. 집권세력이 장악하던 서울시장 자리가 겨우 강남 3구의 몰표로만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시사적이다. 시민들은 이제 더는 엘리트나 특권지배층이 자기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자각해 간다. 천재 한 명이 십만 명을 먹여살린다는 식의 엘리트 의존 논리는 최소한 자기생활을 챙겨야 하는 비특권 시민들에게는 더 이상 타당성이 없을 것이다. 도리어 잘못 생각하는 영재 한 명이 백만 시민의 삶을 망가트릴 수 있는 데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권력은 지역에서 취하고 이득은 중앙, 서울에 상납하는 막튀 엘리트들을 생활주변에서 추방하기 시작한 것만은 분명하다.

■ **‘자본증식을 위한 개발’이 아닌 ‘생명성장을 위한 생태’!** : 6·2시민선택에서 권력전복은 이명박 정권이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4대강개발 사업이 지나가는 상경선을 따라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경상남도, 충청도, 강원도 등은 모두 한강과 낙동강 사업선에 위치하면서 4대강사업의 현장이었다.

이 개발사업이 현장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6·2시민선택에서 분명히 입증되었다. 이제 개발이 곧 지역과 자기생활의 이득으로 직결되는 시대는 지나고 있다. 도리어 자기생활이 터 잡고 있는 생활현장이 자연 순환 속에서 생태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익할 것이라는 자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전 국토에 서식하는 토 건축의 전횡에 대해 대대적인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6·2시민선택이 시사하는 시민연대 : 지구 시민 첫 세대를 위한 시민정치의 활성화, 시민의 자기교육과 축제성 연대의 상시 가동, 그리고 연합정치의 길

이번 6·2시민선택에서 드러난 이명박 집권세력의 가장 큰 맹점은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에 대한 인지무능이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MB집권세력 역시 대한민국 시민능력에 대한 확신결핍이 크게 두드러졌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등 중도보수에서 급진진보에 이르는 다양한 이념 스펙트럼 위에 있는 정파들은 물론이러니와, 87년 체제 안에서 20년 가까이 시민활동을 전개했던 시민단체들도 이명박 체제하의 시민 감성과 시민의식의 급격한 진동을 제대로 추적했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세대들이 이제 중장년기로 접어들고, 민주화 시대에 성장기를 보낸 청년시민들이 대거 정치시민권에 편입되고 있다. 이들은 지구화 조건 안에서 자기 삶의 전부를 보내야 하는 21세기 대한민국 시민 첫 세대며 대한민국에서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지구시민 첫 세대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번 6·2시민선택의 가장 근본적인 흐름은 전 세대에 걸쳐 시민들이 각자 자기 마음 안에서 이명박 보수반동체제를 거부함으로써 전 국가적으로 전복과 반란의 제곱승수효과를 조성해낸 데 있다. 이것이 투표지에 찍혀 개표될 때까지 시민의식의 거대한 용암이 반동의 지표 아래서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혼자서 기표소 안에서 반동을 거부한다고 찍고 나서 보니, 너나없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새삼 집단적으로 확인한 형세였다. 그래서 6·2시민선택은 유례없이 전형적인 ‘주체 없는 혁명’으로 발발했던 것이다. 이 흐름에는 어떤 특정 세대가 단독으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6·2시민선택의 실현 현상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그것이 전통적인 ‘중심 지향적 집결성(concentration)’에 따라 형성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중심주의적 권력집단의 독주에 대항하여 시민사회의 모세혈관에 이르기까지 거부정서와 반란문화가 산포되어 있다가 일정한 제도적 계기가 주어지자 순식간에 특정한 정신적·정치적 연대로 표출되는, 말하자면 ‘분화물의 응집성(condensation)’ 같은 현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MB정권의 집중적 탄압을 받았던 상징적 인물인 박원순 변호사까지 기소되었던 시민 사회권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도리어 증가하여 그 규모가 위축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주도적 중심성을 구사할 정도로 결집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시민단체의 활동은 거부정서와 반란문화의 일상적 산포를 통해 전복의 기운을 시민의 호흡 중에 산소로 기화(氣化)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각 지역에서 야권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해 시민전복의 구심점을 분명히 하도록 만드는 데도 지역의 시민 사회권에 널리 산포된 반란의 기운이 연대하여 응집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오히려 너무 광역적이었던 수도권 시민단체들이 시민사회의 일상에 유포된 반란의 기운을 연대적으로 응결해내는데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 결과 서울과 경기도의 광역단체장은 조기에 완벽한 후보단일화를 기하지 못하고 집권세력에 그대로 남겨두고 말았다.

이와 같은 6·2시민선택의 양상은 앞으로 우리의 시민정치가 어떤 형태로 진행돼야 할지를 제시해준다. 무엇보다 시민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민의 일상적 의식은 그 지평이 지구 차원으로 확대되어 있으면서도 개개 시민의 생활은 철저히 개체화돼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시민

생활은 단순히 다중심적(multi-central)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이중심적(ego-central)으로 이루어져 그 어떤 중심주의적 집결성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면서도 관심은 아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시민자아는 개별자아(mono-ego)가 아니라 다중자아(multi-ego)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이 자기중심적인 시민자아의 다중자아적 생활양식 안에 그들의 관심이 더 풍부하게 충족될 수 있는 정보와 문화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일이다. 즉 개개 시민의 생활이 흥미롭고 풍부해지는 가운데 다른 개인을 이웃으로 삼아 편안하게 자기 삶의 가능성을 공유하는 개인문화를 조성하면서, 일단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축제처럼, 나들이처럼, 모여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시민정치에서 그 어떤 합의를 모으는 데 아주 효과적일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시민 대중에게 흥미 있는 학습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학습은 단지 닫힌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카페에서 친밀하게 모여 수다 떨듯이 토론하고 뜻을 모으는 카페성 자기교육의 기회가 일상의 삶으로 사방에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시민연대가 그 어떤 비장한 분위기가 아니라, 소풍 가듯이 축제성으로 수시로 기획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수다장에는 연령별, 성별, 지역별 또는 인종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교육과 자기계몽은 사이버공간에, 일상생활에 끊임없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

62시민선택이 제도정치에 주는 함의는 무엇일까. 우리가 보기에 62지방선거는 민주진보가 시는 길이 연합정치 노선임을 명백히 입증했다. 다시 말해 나라를 준진시상태로 몰고 갈 정도로 눈이 멀어버린 이명박 정부의 보수반동적 역주행에 맞서, 민주진보 세력이 빨셈의 정치가 아니라 덧셈의 정치로 응답할 때 비로소 상생의 길, 동반성장의 길이 열림을 62선거는 보여주었다. 이는 거꾸로 연합정치의 당면 과제를 저버릴 때는 국민 대중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고립을 자초할 뿐임을 알려준 것이다. 나아가 62지방선거는 여전히 ‘어떤 연합정치인가’ 하는 숙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민

주당은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았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을 어느 정도의 대안을 갖춘 정당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지했는지는 여전히 의문 부호에 부처진다. MB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우세했다는 것이 눈 밝은, 많은 사람들의 견해다. 따라서 6·2지방선거 이후 우리의 민주, 진보정치는 연합, 연대정치 노선을 공고히 해가되, 기득권을 버리고 자기 틀을 깨는 새로운 성찰의 혁신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국민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선의의 경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치열한 혁신의 노력과 선의의 경쟁을 동반한 새로운 연합정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민주, 진보, 희망의 넓은 문이 열릴 것이다. 그렇지 않고 불행하게도 이번 승리에 안주한다면, 어렵사리 되찾은 국민 대중의 신뢰를 또다시 잃고, 2012년 대한민국 정치의 새 판짜기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아무도 타도하지 않았다. 분명히 열흘 전 전쟁기념관에서 눈을 부릅뜨고 남북관계를 전면 단절하겠다고 국민에게 전투의식을 고취하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어디 가서 한국에 투자할 자본가들 앞에서는 한반도에서 전면전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다. 남에게는 전쟁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식구에게는 전쟁할 준비를 하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까. 그래도 우리는 타도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따돌렸을 뿐이다.

“잘 있거라, 반동이여! 널 두고 이제 우리는 평화, 민주, 복지의 대한민국으로 간다. 민주, 진보의 새 연합 정치의 길로 간다.”

2010년 6월

공동편집인 이병찬·홍윤기